좀체 바뀌지 않는 현실이지만, 한 발 더 내딛는 오늘

손상용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운영위원장

노동조합이나 사회단체와 연결되지 못해, 황망한 사고를 당해도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는 유족들이 많을 것이다. 안타까운 일터의 죽음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사고 뉴스가 보도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게 1년에 수백 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돌아가시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뉴스로 보도되지 않거나, 통계로 잡히지 않는 사례는 또 얼마나 많겠는가?

"김 씨가 시키지 않은 일을 하다 과실로 숨졌다"

2020년 5월 22일 광주광역시 폐자재처리업체 조선우드에서 20대 청년노동자 김재순 씨가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당시 회사 대표는 시키지 않은 일을 하다가 재해자에게 사고가 났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하지만 회사는 파쇄기 덮개나 난간 등 안전설비나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재해자에게 사고 예방 교육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2021년 8월 11일 항소심에서 회사 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8개월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망사고 당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를 중심으로 '故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선전전, 기자회견, 법률대응을 했다. 숨진 지 70일 만에 노동사회장으로 장례식을 치렀다. 장애가 있었던 청년노동자의 사고에 지역을 넘어 여론의 관심이 높았고,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았던 중소업체 노동자의 사고에 지역 공단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故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광주전남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사고와 질병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단체'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광주에는 '광주노동보건연대'라는 단체가 역사성을 가지고 활동했었고, 여수에는 '전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이라는 단체가 운영되고 있다. 이런 경험과 실천을 되돌아보며,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을 만들게 되었다.

바뀌지 않는 현실, 일터에서의 청년노동자 사망사고

2024년 8월 13일 전라남도 장성군에서는 학교 에어컨을 설치하던 20대 청년노동자 양준혁 씨가 폭염 속에서 일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장성군의 당일 최고 기온이 35도였는데, 재해자는 안전교육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입사한 지 이틀 만에 현장에서 일하다 쓰러졌다. 열사병 증상에도 1시간 동안 현장에 방치되고, 재해자의 어머니에게 쓰러진 아들을 데려가라고 문자메세지를 발송했다고 했다. 사전 안전보호조치도, 사후 대처도 없었다.

발주처인 전남교육청, 원청인 삼성전자, 하청인 업체는 서로 책임을 전가할 뿐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그렇게 유족은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사망사고 책임자들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촉구하며 수차례 기자회견을 열었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도 함께하며, 광주노동지청 앞에서 천막 분향소를 설치하고 매일같이 출근, 점심, 퇴근 선전전을 진행했다. 전남교육청 앞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교육자들이, 어떻게 청년노동자의 죽음 앞에 사과조차 하지 않느냐'고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책임자 면담을 요청했지만 전남교육청은 묵묵부답이었다.

화성 아리셀 화재참사의 책임자인 삼성전자가, 장성 에어컨 설치 사망사고의 책임자임을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취재요청서를 배포하고 상경 준비를 마쳤다. 그제야 삼성전자는 유족에게 사과하고 분향소를 참배하겠다는 연락을 했다. 요지부동이던 삼성전자가 움직이자 전남교육청도 분향소를 방문해 사과하겠다고 했다. 그때가 9월 10일이었다. 애써 유감을 쥐어짜는 책임자들의 사과가 내키지 않았지만, 더 이상 재해자를 영안실에 안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장례일정을 진행했다.

연일 폭염경보 문자 메시지가 울리는 여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차가운 영안실에 자식을 안치한 부모의 마음은 매일 무너졌을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책임자들의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다짐하는 유족들이 있었기에, 폭염 속에서도 한 달을 함께할 수 있었다.

지역과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기후재난 대응 체계 준비

반복되는 일터의 사고와 질병,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언론 보도 등으로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지역과 현장의 대응이 중요해졌다. 특히 2021년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 참사, 2022년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등으로 시민재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 광주노동지청 앞 천막 분향소에서 고용노동부에 사업주 처벌을 촉구하는 청년노동자 고 양준혁 님의 유가족. 출처 : 손상용

광주전남지역에는 금속노조, 건설노조, 화섬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산별노조와 대공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사업의 기틀이 잘 잡혀 있다. 조합원 및 간부 교육, 사고 발생 시 사후대처 등 체계를 갖췄다. 하지만 산별노조를 넘어 지역 차원의 사전예방 시스템이나 공동대응을 위한 논의체계는 아직 부재한 상황이다. 제조업의 경우 광주는 자동차, 전자, 타이어 산업이, 여수는 화학섬유 산업이, 광양과 순천은 제철산업이, 영암에는 조선산업이 주력이다. 한편 학교급식실과 금호타이어, 기아차 식당 노동자 등 폐암 문제 대응도 필요하다. 건설노조를 시작으로 근골격계 공동대응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각 지역과 산업별 특성에 맞는 대책과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사고가 증가하는 현실도 짚어야 한다.

특히 작년 삼성에어컨 설치기사 20대 청년노동자 폭염 사망사고 대응 후속 사업으로 제조노동자, 건설노동자, 배달노동자 등 기후재난 시기 폭염, 폭우, 폭설, 한파에 따른 지자체의 책임 강화를 위해 노동조합과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연대 폭을 넓힐 계획이다. 지역운동이 녹록지 않지만,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해 한 발 더 내딛는 한 해를 만들어가겠다. 일터